

일본 정부 - “구국의 기술개발은 경제효과도 크다”

일본의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제조산업국장은 장기간에 걸친 불황으로부터 일본경제가 소생하기 위한 여러 시책의 일환으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나 산업의 공동화(空洞化)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제조산업국장은 “각 지역의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들을 위하여 실용화(實用化)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경제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정부가 공공사업에 1,000억엔을 투자하면 그 효과는 1,000억엔에 끝나지만, 실용화기술개발지원에 1,000엔을 투자하면 일년 내에 1,400억엔의 생산을 유발(誘發)하고, 5년 후에는 5,200억엔의 생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유발취업자도 2만 6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의 세이프티·네트(safety·net)와 산업의 체력을 강화해 주는 기술 개발이 모두 필요하지만 ‘구국(救國)’의 기술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